

학교 내 성사안 처리 전문 대응 체계 강화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역량 강화 연수 성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4일 북부청사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의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6 상반기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은 교원, 교육전문직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학교 내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조사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성 사안 처리 전문성을 높이고 통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예방에서 사안 처리까지 전과정을 다뤘으며 ▲사안 조사의 법적 근거와 주요 쟁점 ▲현장 중심 조사 지원 사례 등 실무 역량 강화 중심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김영명 과장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문적 대응 체계를 통해 학교의 사안 처리 부담을 덜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과 연계한 일상적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송민수 기자

용인특례시, 임대농기계 '운송 서비스' 시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026년 임대농기계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농업기계 임대 농가 중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위해 제공된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임대농기계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면 운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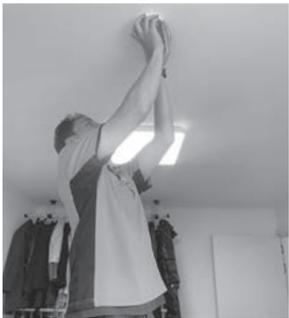
운송은 용인 전 지역이 대상이다. 운송료는 1t 차량 적재 가능 농기계는 편도 5000원, 1t 차량에 실을 수 없

는 농기계는 편도 1만 원이다.

운송서비스와 농업기계 임대 등 문의는 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031-6193-1055/1056)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 농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2년부터 운송서비스를 시작했고, 매년 예산 5000만 원을 들여 연간 농업기계 운송 450건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취약계층에 재난예방시설 무상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예방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를 4월 16일까지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이 해당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분야에 따라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받거나, 가정 내 전기·보일러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소방, 전기, 보일러 분야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 분야 200가구, 전기 분야 150가구, 보일러 분야 100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군포시, 여름철 호우·태풍 대비 종합대책 추진

군포시는 여름철 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중심의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태풍의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우선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상황 직보 체계를 구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SNS 단체 대화방 등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 보고 체계를 강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특보 해제 이후에도 피해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해 피해 수습과 복구까지 빈틈없는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4월 10일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기존 피해 발생 지역뿐만

아니라 주민 추천지역까지 포함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시는 우선대피대상자와 주민대피지원단을 1대1로 매칭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4월 7일에는 단재장 주관 재난대책회의를 개최해 재난상황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할 예정이며, 4월 8일에는 주민대피지원단을 대상으로 활동 방법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후호 군포시장은 "선제적인 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재난 대응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되며, 시는 이 기간 동안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재난안전지킴이' 903명 투입. 반지하주택 등 5만여 곳 점검

31개 시군 참여 반지하주택 등 9개 분야 현장점검 본격 착수

경기재난안전지킴이 903명 투입, 현장 중심 합동점검 및 즉시조치 추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반지하주택 등 9개 분야에 대한 호우 대비 현장점검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분야별 시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확인·조치하는 실행 중심 점검으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보행 안전, 빗물받이, 저수지, 급경사지, 야영장, 청소년 야영장 등 9개 분야 총 5만4,379개소이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6개 점검반을 구성하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경기재난안전지킴이 총 903명을 투입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관리해 단기 응급조치와 중장기 정비가 연계되는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여건상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시설물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한 결과 240건을 시정·권고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안전관리전문위원, 시군 등과 함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물 56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교량, 옹벽 등 토목 시설물과 노후연립 등 건축시설물이며, 안전점검 항목은 시설물 균열·파손 등 결함 여부와 건축물 부등침하, 시설물안전법령 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토목시설물 중 ▲옹벽의 경우 배

수로 정비 불량 및 전면부 누수 발생, 배 면 식생 방지 ▲교량의 경우 배수관 탈락 및 누수, 위험표지 설치 미흡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건축시설물의 경우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건축물 위주로 점검한 결과 ▲내력벽 및 슬래브 균열, 누수·백태, 철근 노출 ▲출입통제, 난간 등 안전시설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도는 사안에 따라 70건에 대해 시정 요구, 170건에 대해서 개선 권고 조치했으며, 추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도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송민수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환영...군민 의견 반영이 핵심"

전진선 양평군수가 24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군민 의견이 반영된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전 군수는 이날 "지난 20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결정을 13만 양평군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되,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시와 광주시를 거쳐 양평군을 연결하는 수도권 동부의 핵심 교통망으로, 교통 체증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기반 사업으로 꼽힌다.

전 군수는 2023년 7월 사업 중단 당시를 언급하며 "군민들이 겪은 충격과 고통은 매우 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들은 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해C가 포함된 노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군 또한 이러한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

강해C 포함·노선 재검토 요구... '군민 의견 반영이 사업 성패 좌우'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사업 재개 발표에 대해서는 "얼어붙었던 군민들의 마음을 녹이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 두 개 노선을 바탕으로 경제성과 주민 편의성을 중심에 두고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군민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 군수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두 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타당성 조사 용역 단계에서 군민들이 요구해온 강해C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평 동부권과 강원도 홍천까지 노선을 연장해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광역 교통망의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

수원특례시, 총부채 감소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됐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전년보다 총부채 742억 원 감소하고, 순자산은 4290억 원 증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총부채는 감소하고, 순자산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회계연도 마감 후 80일 동안 작성한 결산서에 따르면 총부채는 3172억 원으로 전년보다 742억 원(19%) 감소했다. 장기차입금 676억 원을 상환한 것이 부채 감소의 주요 요인이다.

채무 규모도 큰 폭으로 줄었다. 2025회계연도 채무는 1428억 원으로 전년(2054억 원)보다 626억 원 감소했다. 1인당 채무는 2024년 17만 2000원에서 2025년 12만 원으로 30.2% 줄었다.

재정 기반은 확대됐다. 수원시의 2025회계연도 순자산은 19조 9511억

원으로 전년보다 4290억 원 증가했다. 주민편의시설 자산이 2802억 원, 사회기반시설 자산이 979억 원 늘었다.

▲황구지천 생태수자원센터 신축 ▲도로 개설 등을 위한 토지매입 ▲구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순자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5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조 2662억 원, 세입결산액 4조 3387억 원, 세출결산액 3조 9364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0% 이상 증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증가하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등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4022억 원이다. 이 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등을 제외한 순세입잉여금은 1902억 원으로 전년보다 102억 원 감소했다.

순세입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해 집행잔액이 줄어든 결과다.

전년보다 재정 운용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수원시는 결산서(안)를 토대로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결산 검사를 할 예정이다. 시의회 제출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감사위원회가 회계 검사를 해 결산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결산 검사에서 제기되는 개선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민수 기자

양주시,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산불드론감시단'

양주시는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5월15일까지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은 산림과 공무원 5명과 산림재난 대응단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를 통해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감시단은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 등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감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울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 방화 시에는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시, '운정중앙역 문화

공연 콤플렉스' 조성

파주시는 지티엑스(GTX) 역세권 문화시설 용지에 '운정중앙역 문화공연 콤플렉스(가칭)' 조성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용지 매입 계획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착수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오는 4월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뮤지컬 공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20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다목적 소공연장, 전시공간, 문화교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조성이다.

특히 20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은 기초자치단체 단위 공연장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의 대표적인 상징물(랜드마크)이 돼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근 도시와의 문화 연계성을 강화해 광역 문화권의 중심축으로 성장시켜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6월까지 '민물가마

우지 집중포획기간 운영

가평군은 토종어류 보호와 수생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북한강 일대 주요 서식지에서 민물가마 우지 집중 포획 활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18일부터 6월까지 집중 포획 기간으로 정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5-6명으로 조를 편성해 관공선을 활용한 총기 포획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물가마우지는 서식지 접근이 어려워 포획이 쉽지 않지만 산란기인 6월까지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연중 지속적인 관리로 토종어류 보호와 내수면 어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안양역 지하상가

임대로 인하기로 협약

안양시와 안양역소평물(주)은 안양역 지하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변경)을 체결했다.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안양시와 안양역 지하상가의 운영주체인 안양역소평물(주)은 임대료를 기존 대비 30.6%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의 효력은 오는 2031년 12월까지 적용되며, 2024-2025년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상인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어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이 안양역 지하상가 경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양시의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